

기후위기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정치를 기대하며,

22대 총선 인천 환경 정책 제안

[분야1] 기후위기 대응과 2030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 정의로운 전환
- 공공교통 확대

[분야2] 자원순환 정책 개선

- 일회용품 규제 강화
-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분야3] 연안해양생태계 보호 체계 구축

-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
- 해양보호지역 확대 및 BBNJ 비준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분야4]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정책 강화

- 그린벨트 보전, 관리 방안 개선
-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제안 단체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들어가며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으로 이뤄진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해 말, 1만7천명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가 위와 같이 응답했다. 기후위기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투표 하려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기후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5%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민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 표현하며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정책, 정치인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대한민국 환경문제의 종합판인 동시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

인천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LNG 등 각종 발전소와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가 위치해 있으며, 항만과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 최대 환경시설 밀집 지역이다.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인천에 있다. 또한 인천은 비무장지대와 서해안갯벌 등 우리나라 3대 생태축 중 2개가 교차하고 수도권서남부지역 핵심 생태녹지축인 한남정맥이 지나는 한반도 자연생태핵심지역이다. 또한 최초의 인공물길인 아라천을 비롯하여 굴포천까지 2개의 국가하천, 30개의 지방하천 그 외에도 수많은 소하천, 그리고 168개의 섬들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깃들어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는 반면, 어업쓰레기와 하천유입쓰레기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해안선 침식, 경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인천을 들여다보면 기후위기 대응, 자연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현안과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환경의제가 공론화되고 해결되길 바라며 네 가지 분야 정책을 제안한다. 인천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인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전국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이다.

분야1. 기후위기 대응과 2030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과제1.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1. 제안 취지와 현황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의 40% 감축을 명시.
- 인천은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33.9%의 감축을 계획. 2018년 기준 인천시 온실가스의 57.1%가 발전 부분이고 그 중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존재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2023 기후정치바람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민인 최대수명이 2044년까지인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2035년 이전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66.2%의 결과.

2. 정책 제안 내용

-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에너지전환계획 수립
- 공공기금의 해외 석탄채굴과 발전 투자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

과제2. 정의로운 전환

1. 제안 취지와 현황

-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일방적인 전환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개념.
- 석탄발전소 폐지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실직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으나 대책 마련 미흡
- 광역 시도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근거만 포함됨.

2. 정책 제안 내용

-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센터 설치, 정의로운 전환 지구 선정 등을 법제화
- 정의로운 전환에 들어가는 현실적 비용 추산과 이에 따른 기금 마련 제도화

과제3. 공공교통 확대

1. 제안 취지와 현황

- 인천시의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개발, 산업 분야에 이어 3번째로, 전체의 10.8%를 차지.
- 수송 분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절대적인 총 주행거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
- 2023 기후정치바람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 자동차 무소유자 인센티브,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모두 찬성이 우세한 결과를 보임.

2. 정책 제안 내용

- 버스 예산 국고 보조를 통한 단계별 버스 공영제 입법 및 예산 확보
- 대중교통 차량 증가로 공공교통의 분담률 상승.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분야2. 자원순환 정책 개선

과제1. 일회용품 규제 강화

1. 제안 취지와 현황

- 2023년 9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개별 지자체 판단에 맡긴 것에 이어 11월,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사실상 철회함. 2024년 3월, 택배 포장 규제에 대한 단속을 2년 유예하고 포장공간 산정에 보냉재를 제품으로 간주함.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자원순환 정책은 퇴행하고 있음.
-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건설 논란이 있는 인천 지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등 근본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

2. 정책 제안 내용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및 일회용품 사용제한 시행
- 택배 포장 규제 강화 및 유예기간 6개월로 축소
-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과제2.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1. 제안 취지와 현황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는 소각장 신규 건설이 선결 과제임.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폐기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소각장 등 생활환경시설은 시민들의 기피 시설로 입지 선정조차 어려운 상황임.
- 타 지자체, 해외에서는 소각장 등 생활환경시설을 시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득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그 외 시설은 300m로 설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정책 제안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 범위를 실질 영향범위로 확대
- 생활환경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분야3. 연안해양생태계 보호 체계 구축

과제1.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

1. 제안 취지와 현황

-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는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인천, 경기만 등 주요 갯벌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6년 예정) 회의 때까지 확대 등재할 것을 권고함.
- 제48차 등재를 위해서는 2024년 6월까지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등재 의사를 밝혀야만 세계유산 등재 절차에 포함될 수 있음.
- 2023년 기후정치바람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81.1%의 인천시민이 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옴. 이처럼 갯벌을 중요하게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인천시민은 많으나,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능성 지역의 해당 주민이나 지자체는 혹여나 개발행위에 제약이 우려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임.
- 또한 기존 보호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원이나 관리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임.
-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경우, 추가 제재는 없음. 오히려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함.

2. 정책 제안 내용

-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적극 지원
- 제2차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 편성 및 적극 관리
-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에 수산단체, 해양생태 관련 환경단체 분리 및 주민참여 의무화 하는 등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과제2. 해양보호지역 확대 및 BBNJ 비준

1. 제안 취지와 현황

-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확대라는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한국정부도 보호구역 30% 확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23년 12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작성함.
- 국내의 내륙보호지역은 17.3%, 해양보호지역은 1.8%에 불과함. 행정구역상 넓은 바다를 포함하는 인천 특성상 해양보호지역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함.
- 2023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협약(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협약)’에 한국정부도 서명함. 현재까지 공해의 1.2%만이 보호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는 근거가 마련된 것임.
- 이에 공해 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의 발효를 위한 준비 필요.

2. 정책 제안 내용

- 해양 등 보호지역을 30%로 확대
-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BBNJ 협정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과제3.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1. 제안 취지와 현황

- 인천 앞바다는 페어구와 같은 해상기인 쓰레기와 한강, 해안가를 통한 육상기인 쓰레기, 중국을 통한 해외기인 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발생 유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2018, KMI)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발생원 65.3%가 육상기인으로 확인됨. 해양수산부도 2027년까지 육상기인 쓰레기 30%를 저감하겠다는 계획 발표함.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발생원 차단임. 이에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한 법률 개정과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이미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도 회수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도 필요함.

2. 정책 제안 내용

-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하천쓰레기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
- 해양폐기물법을 개정해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용 선박 지원 확대

분야4.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정책 강화

과제1. 그린벨트 보전, 관리 방안 개선

1. 제안취지와 현황

-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 때가 되면 그린벨트 해제공약이 발표됨.
-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도 실패해 옴.
- 그린벨트는 도시 미세먼지, 기온상승, 집중호우 등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도심 지역의 그린벨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로 개발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져오기도 함. 준보호지역으로 상정하고, 관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정책 제안 내용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용어를 생태환경구역 등으로 재명칭 하는 등 도심 환경 보전 취지에 맞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과제2.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1. 제언취지와 현황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된 지 오래임.
- 특히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사업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결국, 부실 심지어는 거짓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도 함.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2종 업체가 3년여 간 수행한 환경현황조사 100여건이 거짓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은 100여 건의 거짓내용에 대한 파악을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채로 평가서 검토를 마쳤다는 의미이기도 함.
- 이에 생물다양성 보전,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내용

-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